

임예진 관세법(2022년 대비) 개정사항

- 관세법 2021. 12. 21. 개정 [시행 2022. 1. 1.]
- 관세법 시행령 2021. 12. 28. 개정 [시행 2021. 12. 30.]
- 관세법 시행규칙 2021. 12. 31. 개정 [시행 2022. 1. 1.]

1차 p.31 / 2차 p.31 : (5) ③ 수정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
 -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

1차 p.98 / 2차 p.67 : 5-1. (6), (7) 신설

(6)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시정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7) 자료제출 기한

상기 (6)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차 p.104 / 2차 p.73 : 2-1. (4) 수정 · (5) 신설

(4) 보정이자

세관장은 상기 (1)과 (2)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조(가산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 ②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상기 (4)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상기 (1)과 (2)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차 p.116 / 2차 p.85 : 7. (5)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100만원	150만원

(5)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1) ② ㉠ 및 (3) ②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차 p.117 / 2차 p.86 : 8. (2) ①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2) 상기 7. (1) ①의 금액을 감면하는 경우

- ① 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1차 p.163 / 2차 p.131 : 1. (2) 신설

(2) 재심사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 (1)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덤핑방지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차 p.190 / 2차 p.158 : 1. (2) 신설

(2) 재심사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 (1)에 따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계조치 물품의 수입 및 징수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차 p.224 / 2차 p.191 : 1. (1)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용도세율 적용대상

별표 관세율표나 법 제50조 제4항(대통령령으로 조정된 잠정세율),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70조부터 제73조(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까지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여 해당 물품에 그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 p.246 / 2차 p.212 : 1. ② 수정 · ③ 신설 (기존의 ② 규정이 ② · ③으로 분리됨)

- ②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③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차 p.263 / 2차 p.229 : (6) ① 표 수정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1차 p.277 / 2차 p.243 : 2. (2) 수정

(2) 감면율

상기 1. (2)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구분과 같다.

상기 1. (1) ③에 따른 물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 ① 규칙 제59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1차 p.280 / 2차 p.246 : 심화 박스 ⑥, ⑩ 수정

- ⑥ 박람회 · 전시회 · 공진회 · 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⑩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

1차 p.301 / 2차 p.267 : 1. (1) ③ 신설 · (2) 수정

[* 시행일 2022. 4. 1.]

(1)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③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이 환불되는 경우의 관세환급

여행자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 ①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②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1차 p.342 / 2차 p.304 : 1. (1) 단서 수정 · ④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그리하지 아니하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법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1) 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6항(세관장의 경정) 또는 제39조 제2항(세관장의 부족세액 징수)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법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1차 p.396 / 2차 p.356 : 1-1. (4)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하역하려면

(4) 하역의 절차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 p.401,402 / 2차 p.361,362 : 4-1. (1), (2), (3), (6) 수정

(1) 선박용품 등의 하역·환적 허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 ①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 ②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 ③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등의 적재 요건

상기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일 때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

(3) 선박용품 등의 범위

상기 (1)에 따른 물품의 종류와 수량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종류, 톤수 또는 무게, 항행일수·운행일수 또는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6) 관세의 징수

상기 (2)에 따른 외국물품이 상기 (1)에 따른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 ②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③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1차 p.458 / 2차 p.416 : check point ⑤ 삭제

1차 p.711 / 2차 p.661 : 12. (3) ⑤ 삭제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1차 p.486 / 2차 p.444 : (7)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3개월	4개월

(7)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

기획재정부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차 p.515 / 2차 p.473 : 1. (4) ①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사이버몰

(4) 매각대행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른 매각을 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사이버몰 등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매각하려는 경우

1차 p.545 / 2차 p.501 : 2. (3) 신설

(3) 의무이행에 대한 조사

세관장은 상기 (1)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을 준용한다.

1차 p.551 / 2차 p.507 : 3.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3/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법 제230조의2]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차 p.558~561 / 2차 p.517 : 8-1. 8-2. 삭제

8-1/ 원산지확인위원회 [법 제232조의3] : 삭제

8-2/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236조의4] : 삭제

1차 p.566 / 2차 p.522 : 11. (1)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 협의사항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1차 p.573 / 2차 p.529 : 4. (1) ⑤ 신설

(1) 통관보류 대상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①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③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⑤ 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⑥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⑦ 그 밖에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차 p.614 / 2차 p.570 : 5-1. (1), (2)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에 따른 의무 또는 절차와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관세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 공인심사

관세청장은 상기 (1)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후단 규정 삭제)

1차 p.615 / 2차 p.571 : 5-1. (3), (4) 신설

(3) 예비심사 요청

상기 (2)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예비심사 결과 통보 및 고려

관세청장은 상기 (3)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상기 (2)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기존 (3), (4) → (5), (6)으로 변경

* 기존 (5) → (9)로 변경

1차 p.615 / 2차 p.571 : 5-1. (5)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 상의 혜택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통관절차 상의 혜택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차 p.615 / 2차 p.571 : 5-1. (7), (8) 신설

(7) 통관절차 상의 혜택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상기 (5)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8)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상기 (7)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차 p.615 / 2차 p.571 : 5-1. (9) 수정

(9)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③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④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 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법 제255조의2 ~ 제255조의7]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이 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을 받기 위하여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제출서류의 적정성, 개별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등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세청장에게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갱신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5조의4(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자율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동사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확인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평가)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 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평가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차 p.657 / 2차 p.611 : 1. (2) 신설

(2) 2억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4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7조의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제27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차 p.693 / 2차 p.643 : 3. (1) ③ 신설

(1) 통계의 작성·열람·교부

관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①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사항
- ②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사항
- ③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등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차 p.712 / 2차 p.662 : 16-1. (1)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

관세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②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기존 (1), (2), (3) → (2), (3), (4)로 변경

1차 p.713 / 2차 p.663 : 16-1. (4)~(6) 통합수정

(5)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① 법 제17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
- ②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 ③ 법 제255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
- ④ 법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환급특례법] 2차 p.729 : check point 수정

개정 전	개정 후
연 1천분의 18	연 1천분의 12

이차율 [규칙 제16조]

상기 2. (3)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차율”이란 연 1천분의 12을 말한다.